



이재명 대통령, 아세안 방문 마치고 서울도착 "이젠 경주 APEC 속으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1호기에서 내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10.27

이재명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의 참석을 계기로 한 1박 2일간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방문 일정을 마치고 27일 밤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정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대통령실의 강훈식 비서실장과 이상호 정무수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이 대통령 내외를 맞았다.

도열해 있던 인사들은 전용기 트랩에서 걸어 내려오는 이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냈고, 이 대통령은 웃으며 이들과 차례로 악수했다. 김혜경 여사가 강 실장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포착됐다.

'정상외교 슈퍼워크'의 전조전 격이었던 아세안 방문을 마친 이 대통령은 눈앞에 다가온 본 무대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및 한미·한중·한일 정상회담 등 '메가 이벤트'를 위한 막바지 점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도착한 전날 동포 만찬 간담회를 했다.이튿날인 이날 오전엔 훈 마넛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및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최근 주목받았던 캄보디아

남치 및 구금 사태를 논의했고, 한국인 대상 범죄 태스크포스(TF)인 '코리아 전담반'을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비롯한 양국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도 자리해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간의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리창 중국 총리와 첫 대면도 이뤄졌다.

오후엔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리 이브라힘 총리와 회담을 끝으로 이틀 간의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전조전 격인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를 거치며 예열을 마친 이 대통령은 메인 이벤트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총력 태세에 돌입했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서 특별 연설을 하는 것으로 경주 일정을 시작한다.

이 기간에 29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한일 정상회담도 30일께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미중 정상회담도 3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북미 대화가 급속히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은 다자회의를 빈틈없이 진행하면서 만만찮은 쟁점이 잠복해 있는 연쇄 양자 정상회담을 소화하는 동시에 미국·중국·북한의 움직임에도 촉각을 기울이는 등 역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해 '외교의 종합예술'을 선보여야 하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 앞에 첩첩이 놓인 일정 중 가장 큰 과제가 포함된 것은 한미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주 앉는 것은 8월 워싱턴 정상회담에 이어 두 번째다.

역대 최단기간에 한미 정상의 상호방문이 이뤄지는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테이블 위에는 지난 회담 이후로도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한 관세협상이란 숙제가 놓여 있다.

최근 고위 협상단이 연쇄 방미해 막바지 점검 찾기를 시도했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타결에 이르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 대통령은 최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

경주APEC 메가이벤트 앞둔李大통령 실용외교 역량 최대 투입

한미·한중·한일 연쇄 정상회담 치르며 미·중·북 동향에 촉각

한미 관세협상 교착 속 '타결 단초' 찾아야...한중 관계회복도 숙제

'전격' 북미회담 가능성도 만반 준비...미중회담 '가교 국가' 역할도

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안보 협상의 경우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추진 및 한미동맹 현대화 등 내용을 포함해 문서화 작업까지 상당 부분을 완료했지만, 만약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발표가 보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측이 관세협상을 지렛대로 마지막까지 남겨두길 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 경우 단순한 '노딜'도 정상회담을 끝낼 게 아니라 조속한 타결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과제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타결에 매우 가깝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 양 정상이 '정치적 결단'을 통해 협정문에 전격 서명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이 경우엔 이 대통령이 공언해 온 '상업적 합리성'을 얼마나 지켜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일대일 정상외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끝이 아니다. 내달 1일에는 국제질서의 패권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시 주석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최근까지 악화일로에 있던 한중관계의 회복 여부를 판단할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중국이 차기 APEC 정상회의 의장직을 인계받기도 하는 만큼 기본적인 정상회담의 초점은 우호 협력 관계의 지속에 놓일 것으로 관측되지만 한편으로 중국은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 한미 간 밀착 견제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앞서 8월 방미에서 '과거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각각 의존하는 상태)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안미경미'(安美經美·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에 의존)의 신호로 의심할 수밖에

에 없는 중국을 상대로 이 대통령이 어떻게 협력의 지속성을 담보해나느냐에 따라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전망이다.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민감한 안보 관련 현안과 관련해 지혜로운 해법을 찾고, 이 대통령의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구상'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30일로 예상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와의 한일 정상회담 역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 셔틀 외교를 조기에 복원하며 보여준 '케미'를 우의 성향으로 꺾히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이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의 전제이자 중심축인 '한미일 협력 강화'가 단단히 유지될 수 있느냐와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에 맞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도쿄로 파견하는 등 내실 있는 회담을 준비해 왔다. 이처럼 숨 가쁜 정상외교를 소화하면서도 이 대통령의 눈과 귀는 한반도 북쪽을 향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거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그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이라며 '더브룰'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2019년의 '판문점 회동' 역시 다소 즉흥적으로 성사됐던 전례에 비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찾아들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더라도 실무적인 준비가 미흡한 만큼 실질적인 대화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북미 정상의 대화 물꼬가 다시 트인다는 것만으로도 한반도 안보 환경에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도적인 대화를 권유한 이 대통령의 한반도 전략이 효과를 볼

에 따라 'END 구상'에도 한층 탄력을 받을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으로서의 북미 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강조하며 상황을 거듭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전날 외신 간담회에서 북미 회동에 대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본다"면서도 "30시간 만에 준비가 이뤄진 2019년 판문점 회동처럼 그 정도 시간 안에 내부적으로 준비할 역량이 된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외교 슈퍼워크'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큰 영향을 줄 또 하나의 변수는 30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이다.

양 정상이 미중 무역 전쟁과 아시아-태평양 안보 문제와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놓느냐에 따라 APEC의 다자주의 정신과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 전략 모두 힘을 얻을 수도, 빛이 바랄 수도 있다.

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회도류 수출 통제 강화, 미국의 100% 추가 관세 등 '살바 싸움'을 벌이던 양국은 최근 서로 갈등 조지를 중단하고 일단 합의를 모색하는 분위기다.

양 정상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화해의 가능성을 발견한다면 '가교 국가'로서 한국 외교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이 대통령으로서의 미중 대화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원활한 회담이 이뤄지도록 지원 역할에도 힘을 기울일 전망이다.

아울러 APEC 의장국으로서도 '경주 선언'을 조율, 국제질서의 혼란기 속에 여전히 타협과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도 외교적 리더십을 증명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인공지능(AD)과 저출생 등 미래 의제를 선도하고, APEC을 계기로 열리는 다양한 경제 행사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 성과도 끌어내는 것도 이 대통령의 과제로 꼽힌다.

이재봉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전북경찰청 국감서 채상병 수사 은폐 의혹 질의 "외압 없었다"

피의자 잇단 사망에 '강압수사' 질타도... "경찰 수사문화 점검 필요"

여당 의원 잇따른 추궁에도 동일 답변 수사내용 유출에도 "유출·방조 안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경찰청 국감사에서 의원들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에게 외압·은폐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김철문 청장은 채상병 사건 수사 당시 경북경찰청장으로 있었고,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 22일 김 청장의 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서울 영등포구) 의원은 "지난해 국회 행안위 경북경찰청 국감사에서 (김 청장에게) 직권남용·직무 유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당시 (김 청장은) 적극 부인했다"며

"지금도 수사에 외압이 없다는 입장에 변함없느냐"고 물었다.

김 청장은 "특별한 외압 없었고,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특검 수사를 성실하게 받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구) 의원은 "채 해병 수사 결과는 절차에 따라 진행했냐"고 묻자 김 청장은 "맞다"며 다시 한번 외압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관된 김 청장의 답변에 더불어민주당 이혜식(서울 강동구) 의원은 "윤석열 정권 기간 많은 공직자가 홍역을 치렀다.

경찰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며 "그렇지만 경찰 스스로 존엄을 지키지 못한 귀책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한 사람이 청장님이라 생각한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조언했다.의원들은 또 최근 전북경찰청에서 불거진 '강압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전북경찰청에서는 지난 8월에만 재개발 비리, 간판 정비 사업 비리, 성범죄 등으로 조사받던 피의자 3명이 잇따라 사망했다.

당시 간판 정비 사업 비리로 수사를 받던 40대는 피의자 조사 이후 "(경찰

이)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한다"며 지인에게 강압수사 정황을 토로했다.

국민의힘 박수민(서울 강남을) 의원은 "수사 과정 자체가 체계적이어야 결과에 승복하고 치유가 된다"며 "특히 검찰이 공소장으로 바뀌고 모든 수사를 경찰이 시작하는 과정을 추진 중인 만큼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중(인천 서구병) 의원 역시 "이런 문제는 개별 수사관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경찰 수사문화 또는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며 "신뢰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모 의원은 2022년에 110건이던 전북경찰청 수사관 기피 신청이 2024년에는 179건으로 62%나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인권 친화적 수사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내 서장과 수사과장을

교육하고 수사 경찰도 개별 교육하는 등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했다"며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이날 행안위 위원들은 전북경찰청의 역사를 소개하는 전북경찰청사 홍보관에 '여수·순천 10·19사건'을 '여순반란'으로 표기한 것과 경찰관 검직에 따른 기강 해이 우려도 언급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비례대표) 의원은 "홍보 내용을 보면 전북경찰은 타지방에서 일어난 좌익세력의 반란과 소요에 대한 원정 진압에 나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쓰여있는데, 이런 홍보가 아니라 반성할 일"이라며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고, 잘못된 부분은 그대로 기술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고동진(서울 강남병) 의원은 "112 접수 처리와 파출소 순찰을 담당하는 경감 2명이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검직하고 있다"며 "심

사를 거쳐서 검직을 허가한 것이 이해가 잘 안된다.

개인 돈벌이와 직무가 겹치면 조직 기강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2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북경찰청에 청장으로 부임했으며 같은 해 7월 해당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도 경북청장으로 근무했었다.

당시 경북청은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과는 달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으며 지난 22일에는 김 청장의 직무수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심귀영 기자